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84
----------	------

발의연월일: 2023년 12월 일

발 의 자: 김종환, 정용한, 김보미, 김장권,
이영경, 박주윤, 추선미, 황금석,
서희경 (이상 9명)

□ 주 문

- LH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을 중단 하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안이유

- 2023년 1월, LH는 '분양전환지원대책 2.0'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할부
유예 이자율을 2.3%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등 현재 경제 상황에서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 그 이후 3월 LH는 할부 유예 이자율을 3.0%로 완화하였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높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LH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무주택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입주민들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나 특별 공제 등 형평성 있는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본부), 한국토
지주택공사(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도시주택기금본부)

○ 붙임 :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1부. 끝.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여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남시에서는 연꽃마을 4단지 등 총 9개 단지 4,736세대 중에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본연의 임무와는 다르게 LH에서는 분양차익에 이자까지 챙기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시점에 사상 최고치의 주택가격 감정가와 LH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도 상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공기관은 국민 이익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발언을 고려할 때, LH의 현재 형태는 정책과 역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H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므로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할부 유예 이자율’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후 매도 시 보유기간을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고 취득가액을 임차 종료 후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또는 특별 공제 등의 형평성을 맞춰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